

2025. 12. 16.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결의안



김 제 시 의 회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최승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25 - 19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최승선, 서백현, 주상현,
오승경, 이병철,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황배연,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의원 (13명)

1. 주 문

붙임 “결의문” 과 같음

2. 제안이유

- 농촌 고령화와 소득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소득 증대의 검증된 수단임.
- 신안군은 햇빛연금으로 4년간 220억 원 배당하여 인구 증가를 실현했으나, 현행 제도는 농지 사용 기간이 짧고 법적 기반이 불안정함.
-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농촌 활력 제고와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해야 함.

3. 주요내용

- 국회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의 금년 내 조속 통과로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

- 주민 지분 참여(자기자본 30% 이상) 및 이익 공유(순이익 30% 배당) 명문화와 농업인 중심 사업 구조 보장
- 부적격 사업자 방지, 농업인 교육·보험·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지원 체계 강화

4. 참고사항

- 결의문 : 별첨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농업은 기후 위기 심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주력작물의 소득 불안정 및 정체 등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가 곧 경제요, 안보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위협은 전국 지자체 39%이상인 인구소멸지역에 농업기반을 견고히 유지하며 농업인에게 새로운 부가 소득원 창출 기회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와 농촌 경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민 직접 참여 형태의 재생에너지 연금제도를 도입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선제적인 일부 지자체 사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활용 순위에서 OECD 38개국 중 32위인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햇빛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2021년 17억 원에서 2023년 47억 원으로 배당금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10월 기준 누적 수익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를 통해 신안군은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농촌지역이 되었다. 현재 군민 49%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국제 사례 또한 영농형 태양광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독일은 기업 주도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작물 수확량 10% 감소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우박 등 이상기후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재해 저항성을 향상시켰고, 일본 노베야마 지역을 비롯해 작목별 맞춤형 시스템 개발로 재배 품종 다변화와 수익 증대에 성공했다.

실증 데이터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비도입 농가 대비 약 2배까지 확대됐고, 2021년 기준 전국 벼농지 3.2%만 활용해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10GW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들은 농지의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연장(현행 8년→최대 23년), 우량농지 보호 체계 마련, 농업인 중심의 사업 구조 확립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농업인 소득 증대 기회가 상실될 우려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제시를 포함한 전국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소농 중심 구조, 농업 경영의 어려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검증된 대안이다. 농작물 생산과 발전 수익을 병행함으로써 농가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해당 이익을 청년 귀농과 청년 창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토대 또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

햇빛연금의 대표적 모델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현재 안정적 운영과 장기 소득 확보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장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 경제적 보전 장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 지분 참여 기준(자기자본 30% 이상 또는 사업비 4% 이상)과 이익 공유 방식(순이익의 30% 이상 주민 배당)을 명문화하여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적격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보험 제도,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등 현장 지원 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동시에 우량농지 보호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 제도는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탄소중립 기여라는 다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이다. 더 이상의 지연은 농촌 위기 심화는 물론, 인구 소멸의 시일을 앞당기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후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후행동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활성화와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 대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인 종합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농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선순환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5. 12. 16.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